

민간인증제도의 현황과 운영에 관한 연구

고 현 우[†]

서경대학교 산업공학과

A Study on State and Operation of Non-government Certification in Korea

Hyun-Woo Goh[†]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University of Seokyeong

The Certification system will be able to expect that effect of marketing and the corporate image rising, if the certification body guarantees the contents of certification against industrial technical advance and safety, environment and efficiency, quality when it is suitable in the standard which is provided.

The certification system where the private organization operates but recently on the legal notarization outside is disordering and the trust regarding the certification falls and the objective and gist of origin are damaged.

But recently the trust of certification has fallen and the objective and gist of origin are damaged. Because the non-government certifications are disordering.

Also the damage of the consumers majority occurs but it is insufficient the investigation analysis against the present condition regarding a non-government certification system and the operation actual condition. So it is necessary the actual condition where the countermeasure against hereupon is urgent.

In this study, we present the operation direction of efficient against non-government certification system through investigation and the analysis.

Keywords : Certification, Certification system, Non-government certification

1. 서 론

최근 산업기술시험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체가 동일한 제품에 대해 정부나 민간기관으로부터 비슷한 인증을 중복 취득하는 바람에 발생하는 매출손실이 연간 총 9조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1]. 특히 인증을 받는 데 소요되는 직·간접비용(4조7600억 원)까지 합칠 경우 총 손실액은 무려 1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증 중복을 없애고 ‘한 제품에 대해 하나의 인증제’를 시행할 경우 1조5700억 원의 직·간접비용 절감효과가 예상되며, 이 경우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15.15개월)도 4.03개월(26.7%) 단축 가능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동일 제품에 여러 인증이 중복돼 있는 것은 정부부처는 부처대로, 민간기관은 민간기관대로 별도의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인증제도는 14개 정부 중앙부처가 57개의 법령에 근거해

제 각각 34개의 강제인증과 46개의 임의인증 제도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화학시험연구소를 비롯한 수십여 곳의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민간인증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만들어진 인증제도가 유사한 인증이 중복되는 바람에 많은 기업이 시간을 낭비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등 오히려 기업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민간인증은 자체규정과 기준에 따라 협회, 조합, 시험연구원 등에서 약 60여 개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제기준에 의한 절차규정이 미흡하고, 인증품목과 기준이 법정(강제·임의)인증과 중복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인증제도 혁신을 위해 민간인증제도의 운영실태 분석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민간인증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 정착을 통한 기업의 부담 해소 및 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민간인증제도의 현황과 운영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 및 운영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인증폐해 사례

인증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폐해는 법정 및 민간인증의 구분 없이 유사하다. 인증과 관련된 기업 및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사례 및 불합리한 사례 즉, 피해사례의 유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인증절차에 대한 공신력 저하

인증기관의 인력과 장비가 부실하고, 인증을 남발하여 공신력 저하와 이로 인한 피해 발생

(2) 허위인증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홍보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란가중 및 피해 발생

(3)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부실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부실로 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의 품질, 성능 및 안전도 저하로 소비자 피해 발생

(4) 중복인증

유사한 인증마다 시험항목의 중복으로 시간과 비용과 다 발생으로 기업비용증가 및 소비자 구매비용 증가

(5) 기업 간 과당경쟁으로 마구잡이 인증획득

인증효과에 대한 검토없이 인증마크를 앞세운 경쟁업체간의 마케팅 경쟁으로 인한 무분별한 인증 획득 및 원가발생으로 소비자 구매비용 증가

3. 민간인증 중복실태

민간인증 중복 실태조사는 제품인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06년 말까지 56개의 민간인증이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

3.1 범주별 인증 중복현황

민간인증을 법정강제 및 임의인증에서 분류하고 있는 범주에 따라 구분했을 때 관련 범주별로 민간인증, 법정강제인증 및 법정임의인증의 중복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법정강제인증의 범주는 5개로 '안전', '품질', '환경', '식품안전', '보건'으로 구분된다. 또한 법정임의인증의 범주도 강제인증의 '안전', '품질', '환경', '식품안전'을 포함하여 '에너지', '신기술',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으로 9개 범주로 구분된다.

따라서 법정인증을 총 9개 범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민간인증을 대응하는 범주로 나누어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일부 민간인증은 몇몇 속성을 갖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범주에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우선은 주된 속성을 바탕으로 범주 구분을 하였다.

<표 2>에서와 같이 민간인증의 대부분은 법정강제인증과 임의인증의 범주에 모두 포함된다.

또한 민간인증의 약 55% 정도는 '품질'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환경'(13%)과 '안전'(11%)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된 바와 같이 민간인증의 약 80%는 '품질', '환경', '안전'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3.2 민간-법정인증 중복현황

민간인증과 유사한 법정인증의 중복은 동일 범주 내에서 인증의 목적, 대상, 기술수준이 동일하거나 일부 유사한 경우를 중복으로 판단하였다.

이 경우에는 하나의 인증으로 통합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복여부를 파악하였다. 즉, 법정인증의 규격이나 기술기준에 대한 틈새인증과 기준강화인증의 경우는 법정인증의 개정을 통해 충분히 흡수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표 1> 민간인증제도 현황

인증제도	인증기관	인증마크	인증제도	인증기관	인증마크
품질보증제도 (Q마크)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6개 민간기관		광촉매인증	한국광촉매협회	
K 마크제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ER마크	한국화장품공업협동조합	-
제품안전성(S마크)	한국화학시험연구원		건강보조식품인증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귀금속 및 보석 상품의품질보증(태극마크)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		미세먼지인증	한국화학시험연구원	-
홀(금, 무공화)마크	한국귀금속보석기술협회		미생물인증	서울대학교미생물연구소	-
금마크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세라믹소재신뢰성평가인증	요업(세라믹)기술원	-
건마크	한국전자재시험연구원		국산섬유제품사용인증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우수품질인증 (GH마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우수 e러닝 콘텐츠 품질인증	한국 U-러닝연합회	
보건신기술인증 (HT마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교육용 콘텐츠 품질인증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B마크	한국공기청정협회		SCS인증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CA마크	한국공기청정협회		ASP인증	IT렌탈산업협회	
설비기자재성능인증	한국설비기술협회		개인정보보호마크인증	정보통신산업협회	
명품마크	한국의류시험연구원		I-SAFE 인증	정보통신산업협회	
명품브랜드인증	한국표준협회		FI품질인증	한국원적외선협회	
으뜸상품인정	한국표준협회		Wellbix인증	연세대학교 학술과학기술연구소/KSAC	
위생가공마크	한국의류시험연구원		Well-being인증	한국능률협회경영인증원	
원적외선마크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디자인품질인증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자외선차단마크	한국의류시험연구원		EV-KERI마크	한국전기연구원	
향가공마크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자판기인증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골드다운마크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자일리톨함량인증	대한치과의사협회	-
항균마크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우수농산물관리인증제도 (GAP)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Q마크	한국의류시험연구원		관광기념상품인증	한국관광공사	
HS마크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콜센터품질인증	한국텔레마케팅협회	
SF마크	FITI시험연구원		e러닝전문기관인증	한국U러닝연합회	
ST마크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한우판매점인증	전국한우협회	
전자기장환경인증(EMF)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KOSHA 18001인증	한국산업안전공단	
전자파환경인증(EMC)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우수종합건강진단센터	종합건강관리학회	-
TTA인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LPG안전관리 우수판매업소인증	한국가스안전공사	

<표 2> 범주별 인증 중복현황

범주	법정강제인증	법정임의인증	민간인증	비고
안전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자동차관리법 항공법 주차장법 건축법 전파법 전기통신기본법 선박안전법 공연법	공산품안전검정 S마크제도	제품안전성(S마크) HS마크 ST마크 KOSHA 18001인증 LPG안전관리 우수판매업소인증	6
식품 안전	축산물가공처리법 식품위생법	축산물HACCP 식품HACCP	우수농산물관리인증제도 (GAP)	1
환경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소음진동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해양오염방지법	환경경영체제인증(ISO14000) 환경설비품질인증 우수재활용제품품질인증(GR마크) 환경마크 환경성적표지제도 RPF품질규격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및저공해엔진	HB마크 CA마크 전자기장환경인증(EMF) 전자파(EMC)환경인증 미세먼지인증 Wellbix인증 Well-being인증	7
보건	약사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화장품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SF마크 건강보조식품인증 미생물인증 우수종합건강진단센터	4
소 프 트 웨 어		GS 인증 정보보호시스템평가인증 정보보호관리체제인증 ES인증 eTrust인증	우수 e러닝 콘텐츠품질인증 교육용 콘텐츠품질인증 SCS인증 ASP인증 개인정보보호마크인증 I-SAFE 인증	6
서비스/ 디자인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 우수산업디자인마크(GD)	디자인품질인증	1

<표 2> 범주별 인증 중복현황(계속)

범주	법정강제	법정임의	민간	비고
품질	계량에 관한 법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먹는물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소방법	GMP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KS마크) 품질경영체제인증(ISO9000) 신뢰성인증(R마크) 품질표준설비 인증 품질경쟁력우수기업인증 중소기업우수제품 마크(GQ마크) 성능인증 싱글PPM품질 인증 농산물품질인증 친환경농산물인증 전통식품인증 특산물인증 임산물품질인증 도시철도용품 품질인증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 기술평가인증 수산물품질위생인증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품질보증제도(Q마크) K 마크제도 귀금속 및 보석상품의 품질보증(태극마크) 홀(금,무궁화)마크 금마크 건마크 우수품질인증(GH마크) 설비기자재성능인증 명품마크 명품브랜드인증 으뜸상품인정 위생가공마크 원적외선마크 자외선차단마크 향가공마크 골드다운마크 향균마크 EQ마크 TTA인증 광촉매인증 ER마크 국산섬유제품사용인증 FI품질인증 EV-KERI마크 자판기인증 자일리톨함량인증 관광기념상품인증 콜센타품질인증 e러닝전문기관인증 한우판매점인증	31
에너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 에너지마크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신기술		한국신기술인증 (NT마크) 우수품질인증(EM마크) 국산신기술인정(KT마크) 우수신기술인증 (IT마크) 건설신기술지정 제도(CT마크) 환경신기술제도(ET마크)	보건신기술인증(HT마크)	1

<표 3> 민간-법정인증 중복현황

번호	민간인증	법정강제	법정임의
1	전자파(EMC)환경인증	MIC	
2	품질보증제도(Q마크)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
3	K마크 제도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
4	HB마크	친환경건축자재인증	
5	Well-Being인증	친환경건축자재인증	
6	Wellbix인증	친환경건축자재인증	
7	EK-KERI마크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표 3〉 민간-법정인증 중복현황

번호	민간인증	법정강제	법정임의
8	우수품질인증(GH마크)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식품위생법	
9	LPG안전관리우수 판매업소인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0	건강보조식품품질인증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GMP
11	건마크	건축법, 친환경건축자재인증	
12	교육용컨텐츠품질인증		GS인증, ES인증
13	우수 e러닝컨텐츠 품질인증		GS인증, ES인증
14	e러닝전문기관인증		GS인증, ES인증
15	설비기자재성능인증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
16	자판기인증(KOVA마크)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
17	개인정보보호마크인증		정보보호관리체제인증
18	I-SAFE인증		정보보호관리체제인증
19	으뜸상품인정		전통식품인증, 특산물인증
20	디자인품질인증		우수산업디자인마크(GD)
21	보건신기술인증(HT마크)		신기술
22	우수농산물관리인증제도(GAP)		농산물품질인증
23	CA마크		공산품안전검정,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
24	안전완구인증(ST마크)		공산품안전검정
25	HS마크		공산품안전검정

〈표 3〉에 민간-법정인증 간 중복현황을 나타냈다.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민간인증의 45%는 법정인증과 중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Well-Being인증과 Wellbix인증처럼 민간-민간의 중복현상도 볼 수 있다.

이처럼 민간인증과 법정인증의 중복은 소비자들이 인증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겪는 이유이기도 하다.

3.3 품목별 인증 중복 현황

실제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에 대한 인증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역추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52개 품목을 조사하였고 그 중에서 민간인증을 받은 품목 98개에 대해 법정인증과의 중복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조사품목의 40%가 민간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조사대상 품목의 대부분은 법정인증을 받은 상태이므로, 결국 40%는 최소한 하나 이상은 법정 인증과 중복됨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전기장관은 법정강제인증인 EK마크 외에 민간인증인 품질보증Q마크, EMI환경인증, 전자파환경인증, 으뜸상품인증, 명품브랜드 등 5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인증효과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이처럼 하나의 품목에 여러 인증을 받는 것, 특히 강제인증이 아닌 민간인증을 받는 것은 인증을 하나의 마케팅 수단으로

여기거나, 업체 간의 과도한 영업경쟁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 인증효과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제품 원가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소비자에게 구매가격이 높이는 피해를 줄 수 있다.

민간인증 가운데서도 ‘품질보증Q마크’ 인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6개 시험기관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품질인증 마크로서 공신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법정인증이 역할을 못하거나 법정인증을 부여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의례적으로, 당연히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업계의 관행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민간인증 운영실태

민간인증의 운영실태 조사는 인증절차, 인증실적, 인증수수료, 연간 인증수수료, 인증번호, 국제기준 부합화 여부의 관점에서 조사와 분석을 병행한다.

4.1 인증절차

인증절차는 신청서류를 접수 → 서류심사 → 공장 또는 제품심사 → 판정 → 인증교부 프로세스를 밟게 된다.

본 조사에서는 조사 가능한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

사, 공장 또는 제품심사, 판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 분석한다.

기본적으로 민간인증기관들은 인증을 위한 절차를 공지하고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단체들은 심사와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 운영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일부 단체에서는 구체적인 인원, 자격요건, 내부·외부 인사 구성 등 평가위원 구성을 위한 국제기준에 대해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평가위원을 전문가로 구성하면서 학계 교수진만으로 구성하기도 하고(광촉매협회), 평가위원이 고정되어 운영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거나(한국자판기공업협회), 협회직원이 평가위원으로 활동(한국공기청정기협회,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하는 사례가 있다.

4.2 인증실적

조사된 기관의 3년간 인증실적 건수를 파악함으로써, 민간인증의 활성화 정도를 파악한다.

최근 3년간 인증실적으로 보면 조사 기관이 속한 시장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인증대상이 기업과 일반 소비자(금, 태극마크 등)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한편, 최근의 인증시장에 뛰어난 웰빙분야는 아직 홍보부족인지 실적이 많지는 않았다. 반면, 정보통신 관련 인증과 환경관련 인증건수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인증건수에서 아직 실적이 저조한 단체는 시장이 성숙되지 않아 상대적인 영세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4.3 인증수수료

인증수수료는 시험비, 인증비, 사후유지비로 나눌 수 있다. 인증을 받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각 인증마다 시험방법, 소요경비, 기간 등을 고려해서 책정된다. 기본적으로 인증비는 30만원~50만원 정도이며, 공장심사 여부, 1차, 2차 심사 여부에 따라 같은 인증 내에서도 차이가 났다.

사후관리비는 재심사비와, 마크 사용료 등이 계상되어 산정되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랐다.

4.4 인증번호

인증심사 결정을 마치면 인증부여를 하게 되며, 이때 인증마크와 함께 인증번호가 부여된다. 인증번호는 인

증을 관리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인식코드이다.

조사된 기관의 인증번호체계는 다양하며, 기본적으로 기관(인증)-품목(고유번호)-년도-일련번호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인증번호체계는 향후 국제화의 개념에서 국제기준체계에 따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4.5 인센티브 현황

인증취득에 따른 인센티브는 인증기관이 인증을 유도하는 유인책이기도 하지만 기업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인증취득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인증취득과 관련한 인센티브가 너무 정성적이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인센티브가 법정인증에 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정부조달 품목에 우선선택 또는 가산점 부여와 같은 인센티브는 또 다른 법정인증이 될 소지가 있다.

4.6 국제기준부합화

Q마크의 경우는 KS와 거의 부합되고 있으며, 다른 민간인증은 KS나 국제규격 및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있다. KS나 ISO에 부합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동일한 규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기술기준이 KS나 ISO보다 높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기술기준이나 규격에 대한 부합화도 필요하지만, 인증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ISO GUIDE에 부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5. 민간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방향

효율적 운영이 기관 자체의 운영에서의 효율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민간인증이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공신력을 갖추고 있고, 체계적으로 인증에 대한 관리와 가치향상에 주력하는 것에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민간인증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국제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민간인증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증에 대한 제도가 자율적으로 발생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기준에 맞추어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 국제기준 가이드라인인 ISO/IEC GUIDE 65의 내용에 충실한 것을 의미한다[2, 3]. 이것은 인증시장의 대외 개방에 대비하고 인증기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둘째, 민간인증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간섭하는 것은 민간인증의 자율성에 위배되므로, 정부의 역할은 인증기

관으로서 공신력을 갖출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설정해주고, 이에 대한 준수 및 채택여부는 전적으로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

6. 민간인증제도의 개선방안

지금까지 민간인증과 법정인증 간의 중복, 그리고 민간인증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민간인증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고 효율적 운영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따라서 민간인증제도가 경쟁력을 갖추고 또한 올바른 경쟁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에게 공신력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개선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3가지 방안-① 등록제 도입, ② 조정기관 설립 ③ 자율체제유지-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해 내·외부 환경에 대한 강·약점을 분석하고 3가지 방안을 고려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다.

6.1 등록제 도입 방안

등록제도는 정부가 민간인증기관의 갯수 및 민간인증 운영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민간인증활성화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법정인증과 중복 및 범주별 난립하고 있는 인증에 대한 검증을 통해 기업 및 소비자에게 민간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에 대한 SWOT분석은 <표 4>와 같다.

<표 4> 등록제 도입에 대한 SWOT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간에 민간인증 제도 개선 가능 	S	W
	O	T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전담 조직의 운영 및 위상 애매모호 조직비대 예산확보 한시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인증 제도 취지에 반하는 정책으로 기관들의 반발 규제완화 요구 통상마찰 발생 한미 FTA체결로 인한 UL 등 해외인증사업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인증과의 중복에 대한 혼란 중복인증에 대한 기업의 부담 가중 인증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민간인증에 대한 경쟁력 확보 목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미 FTA체결로 인한 UL 등 해외인증사업대행 기업과 소비자로부터 방입에 대한 책임추궁 	

6.2 조정기구 설립 방안

가칭 ‘민간인증협의회’와 같이 민간인증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율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민간인증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 및 조정하는 기구 설립하는 안이다.

이 제도에 대한 SWOT분석은 <표 5>와 같다.

<표 5> 조정기구 설립에 대한 SWOT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자율성 보장 중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다 	S	W
	O	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한 추진력 협의 조정의 한계 운영예산확보의 어려움 협의체의 주도권 다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미 FTA체결로 인한 UL 등 해외인증사업대행 보다 빠른 조정·협의의 요구 압력 국내 타 인증기관의 시장진입 방해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인증과의 중복에 대한 혼란 중복인증에 대한 기업의 부담 가중 인증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민간인증에 대한 경쟁력 확보 목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미 FTA체결로 인한 UL 등 해외인증사업대행 보다 빠른 조정·협의의 요구 압력 국내 타 인증기관의 시장진입 방해 가능성 	

6.3 자율체제 유지 방안

자율체제유지는 현재의 민간인증제도를 그대로 두는 방안이다. 비록 폐해가 발생되고 있으나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일정기간 후에는 자체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증기관만이 살아남는다는 원리에 충실한 방안이다.

이 제도에 대한 SWOT분석은 <표 6>와 같다.

<표 6> 자율체제 유지에 대한 SWOT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시장의 원리에 충실 	S	W
	O	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간의 자율조정 필요 기업이나 소비자가 인증에 대한 정보획득이 어려워 폐해가 발생 시 피해 규모 큼 자율조정 전까지 인증의 남발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미 FTA체결로 인한 UL 등 해외인증사업대행 기업과 소비자로부터 방입에 대한 책임추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인증의 중복에 대한 혼란 중복인증에 대한 기업의 부담 가중 민간인증 소비자 피해 사례 민간인증에 대한 경쟁력 확보 목소리 정부의 규제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미 FTA체결로 인한 UL 등 해외인증사업대행 기업과 소비자로부터 방입에 대한 책임추궁 	

6.4 혼합제도 도입 방안

위의 각각의 방안은 장점과 단점이 혼재되어 있어 하나의 방안으로는 효율적인 운영과 소비자의 피해방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대안으로 이들 방안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혼합 형태의 방안을 제시한다.

혼합 형태의 방안을 제시하기 전에 민간인증제도 개선에 대한 전제조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민간인증제도 개선은 민간인증의 취지를 벗어나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먼저 정부의 개입은 곧 민간인증제도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며 자유경제시장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둘째,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폐해에 대해 국가가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방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간인증제도의 개선은 ‘민간’이라는 취지 및 자유경쟁의 원칙과 궁극적인 소비자 보호의 국가 책임간의 Trade-off 문제이다.

따라서 제안하는 혼합형의 방안은 먼저 국가의 국민 보호의 의무에 따라서 등록제 도입이나 조정기관을 설립하여 단기간에 한시적으로 공신력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관을 정리하고, 이 후에는 자율적인 체제로 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기자는 방안이다.

이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공신력과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 및 지침이 제정되어야 하며, 자율적인 체제에서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인증기관을 소비자들이 평가할 수 있는 정보공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정보공개 또한 민간인증기관들의 운영실태와 인증에 대한 공신력을 평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과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접근(access)을 보장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7. 결 론

인증제도는 산업기술발전과 안전, 환경, 성능, 품질 등에 대해 규정된 기준에 적합하면 인증기관에서 그 인증내용을 보장함으로써 마케팅 및 기업이미지 제고 등에 있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법정인증 외에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인증제도가 난립하고 있어 인증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본래의 목적과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민간인증제도에 대한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 분석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56개 민간인증제도의 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해 조사와 분석을 하였으며, 국제기준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민간자율을 통한 효율적인 민간인증제도의 운영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향후 민간자율의 효율성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산업자원부; “국가규격 및 적합성 평가체계의 혁신 방안연구”, 산업자원부, 2006.
- [2] ISO; “ISO Guide 65 General Requirements for Accreditation of Product Certification Body,” ISO, 2006.
- [3] ISO; “ISO/IEC GUIDE 65 General requirements for bodies operating product certification systems,” ISO, 1996.